정후식칼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나라

논설실장·이사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서울로 보내어 공부를 시켜야 입신출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언도 널리 쓰인다. 수단이나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서울은 지명이면서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이기도 하다.

이들 표현은 한국인들의 의식과 우리 사회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서울 중심적, 중앙 지향적 사고다. 서울은 조선시대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600년 이상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심지였다. 특히 광복 이후 경제 개발 시대에는 주요 산업의 본거지로 팽창을 거듭했다. 모든 분야가 서울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비꼰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오를 정도였다. 공룡이 된 서울은 급기야 그 영토를 경기와 인천까지 확장하며 거대 도시(megalopolis)로 성장했다. 사람은 물론 기업과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수도권 공화국’의 탄생이다.

수도권 과밀화의 대표적인 지표는 인구다. 지난해 말 서울·경기·인천의 인구는 국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주민 등록 기준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가운데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개 광역 시도에 거주하는 지방 인구는 수도권보다 1737명 적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다.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 인구의 과반이 몰려 사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60년 전인 1960년만 해도 20.8% 수준이었다. 그랬던 것이 1980년 35.5%, 2000년에는 46.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인구가 몰리다 보니 지역 내 총생산(GRDP) 쏠림도 심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 GRDP 1900조 원 가운데 수도권은 984조 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광주는 39조 원으로 2.1%, 전남은 76조 원으로 4.0%에 그쳤다.

거대한 ‘수도권 공화국’ 탄생

일자리와 주요 인프라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신규 취업자의 60.8%, 그리고 공공기관과 주요 대학, 요양기관, 문화시설 등도 40~50%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날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고도(高度) 비만’으로 각종 합병증과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 당연히 주택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평당 1억 원’에 육박하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교통체증이나 환경오염이 가중되면서 삶의 질은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영양실조로 쇠퇴를 거듭하며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각하다. 이는 호남권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145만 6468명이며 전남은 186만 8745명, 전북은 181만 8917명으로 3개 시도를 합쳐 1년 새 3만 5000명이 줄었다. 호남의 인구 비중은 1970년만 해도 국내 전체의 20.4%에 달했지만 지금은 9.9% 수준이다. 5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방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남을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30년 내 소멸 위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호남권 등 지방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층인 10~30대가 교육과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는 소비 위축과 생산력 저하,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유권자 수까지 덩달아 줄어들면서 정치적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불균형은 서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과도한 수도권 편중과 국토의 양극화는 국가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재앙 수준의 ‘파멸적 집적(集積)’이자 ‘국가 비상사태’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공화국은 역대 정부의 편향적 국토 개발 정책에서 비롯됐다.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다. 수도권 집중은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한때 주춤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후속 대책이 실종되면서 되레 가속화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약속했지만 진전이 없다. 외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쏠림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균형 발전·분권 총선 의제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지방을 희생양 삼아 수도권을 살찌우는 정책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그 단초가 되는 일자리와 교육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서두르고,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 일자리를 활성화해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지역마다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필수적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두 기둥이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들 과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를 핵심 정책과 공약으로 적극 채택해, ‘지역이 강한 나라’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은펜칼럼

뉴 시니어의 등장과 일자리 정책의 변화

심 명 섭
국학자료원(주) 시니어 자문위원

우리 사회 인구 구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만 65세가 되는 2020년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무려 700만여 명이 노인층에 편입된다. 이른바 뉴 시니어(new senior)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뉴 시니어는 한국 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속히 증가한 시점(1955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둔화하기 시작한 시점(1963년) 이전까지 출생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 집단이다.

이들은 이전 시니어 세대와는 달리 고학력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새로운 인생으로 계속적인 사회 참여나 경제적인 활동,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을 추구하며 높은 구매력과 자립적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시니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미, 여가 활동,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시니어 사회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시니어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 뉴 시니어 또는 뉴 실버,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불리고 있다. 뉴 시니어의 등장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진행된다. 이렇게 사회가 고령화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말미암은 경제 성장률 저하와 의료 비용의 증가, 노년 부양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양 부담도 존재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율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려면 뉴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의의는 은퇴 이후에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득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예로 올해부터 만 65세 인구 중 소득 하위 20%에게는 기초 연금을 추가 인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크게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공익 활동, 재능 나눔)과 일자리 지원 사업(시장형, 인력 파견,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연계형)으로 나뉘어진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익 활동 사업의 경우에는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선정 기준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기초 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노인들도 일자리에 참여 가능하도록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시간 선택제는 물론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층으로 막 진입한 뉴 시니어의 다양한 특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뉴 시니어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노인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노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등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 일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복지 서비스의 중복 문제, 실적 위주의 운영, 임금 피크제에 대한 민간 기업의 호응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심화된 노인 사회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뉴 시니어들의 노인 인구 진입에 따른 일자리 수요를 개발하는 한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뉴 시니어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기 고

공유 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김 황 식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공유 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에서 개인의 소유는 줄어들고 공유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의 예측은 맞아 떨어졌다.

공유 경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승차 공유, 숙박 공유, 공유 주방 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 지자체별로 자전거를 공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유 경제와 더불어 개인간의 공유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집집마다 남아도는 물품들이 많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관만 하고 있는 물품들은 버리기에는 아깝고, 보관하기에는 불편하다. 이런 물품들을 개인간 직거래를 통해 나누게 된다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끔씩 아나바다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열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공간의 제약이 많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 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마켓들도 많다. 직거래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고 구매하려는 물품의 상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다. 의류, 신발, 가방, 전자 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래의 확산은 농촌 가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농협에서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수입을 높이거나 소비, 즉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공유 경제의 확산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품 뿐 아니라 농산물도 직거래 장터의 확산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공유 경제의 다양한 플랫폼이 마련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

한편 최근 우한 폐렴 확산으로 공유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좀 더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주요 관문 코로나 방역 허술, 광주도 뚫렸다

결국 광주도 뚫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16번째 확진 환자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광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여행한 후 지난달 19일 입국한 43세 한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귀국한 지 엿새 만인 25일 저녁부터 발열과 오한 등 증상이 시작됐다. 증상이 나타난 이후 광주21세기병원과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지만 이달 2일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지난 3일 전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한 뒤에야 신종 코로나 감염 배제를 위해 격리됐다.

이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다. 과거 폐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이 환자는 확진되기 전까지 무려 16일간 격리 등의 조치 없이 일상생활과 병원 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광주에서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하루 평균 5만여 명이 왕래하는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송정역, 광주공항 등에는 방역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초 장비인 발열감지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방역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심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 관문에 대한 검역·방역 장비를 서둘러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도 늘려야 한다. 시민들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대외 활동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광주는 5년 전 중동발 메르스 공포 속에 치러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한 명의 감염 환자 발생 없이 완벽한 방역 체계를 유지한 저력이 있다. 이번에도 민관이 힘을 합쳐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마스크 저소득층 지원 ‘방역 양극화’ 해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생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 방역용품 가격이 크게 올라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성인용 마스크의 경우 2000원~3000원대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없는 빈곤층은 마스크 한두 개 구입하는 일조차 버거운 형편이다. 노동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년 빈곤층의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한층 더 힘겹다.

방역용품 구매 부담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복지재단은 취약 계층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배부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정작 광주·전남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4920만원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지난 30일부터 마스크(9000개)와 손 세정제(770개), 손 소독제 (200개), 체온계(400개) 등을 구입, 자치구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 등에 보냈다. 전남도도 1억 98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 사업’으로 22개 시·군에 보냈지만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방역마저 양극화로 이중 소외를 당해서야 되겠는가. 당국은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루속히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전략공천

선거철이면 ‘전략공천’이라는 단어가 각종 언론매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전략공천’(戰略公薦)은 당선이 유력한 특정 후보를 정당이 경선 과정 없이 입당 절차만으로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이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특정 인물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다. 기존 예비 후보들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선거구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은 민심 이반을 유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민주당이 지역 민심을 뒤로 한 채 영입 인사들을 광주·전남에 내리꽂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2014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권은희 후보를, 같은 해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광주 북구 갑 후보등을 전략공천하면서 민심 이반의 후폭풍 경험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민들로부터 뼈아픈 심판을 받으면서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1석만 얻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민주당의 일당 독점 폐해가 안하무인격의 전략공천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었다.

21대 총선을 앞둔 현재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광주 일부 선거구 예비 후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력이 약하다고 내친다면 지역에서 바닥 민심을 다지며 정치 활동 캐리어를 쌓아 온 지역 정치인들은 앞으로 중앙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영입한 인사들을 어떻게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에 보내야 하는 중앙당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또다시 ‘내리꽂으면 된다’는 식의 전략공천은 지역민들이 결코 바라지 않는 바다.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전략공천은 20대 총선처럼 지역의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